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9. 2.(화) 12:00  
(지면) 2025. 9. 3.(수) 조간

##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,426억 원 편성, 사업비 6조 6,665억 원, 올해 대비 43.8% 증가

- AI 민주정부 구현, 국민 안전 확보,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, 사회통합 등 중점 투자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,42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. 예산안은 9월 2일(화) 국회 제출 후 상임위,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.
- 지방교부세는 69조 3,459억 원,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,302억 원이며,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 원(43.8%↑)이 증가한 6조 6,665억 원을 편성했다.
-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(AI) 민주정부 구현, 국민 안전 확보,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,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.

### < 2026년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>

| 사업비 합계    |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| 국민 안전     | 자치발전·균형성장 | 사회통합 등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6조 6,665억 | 8,649억        | 2조 5,197억 | 2조 5,921억 | 6,898억 |

- 행정안전부 중점 투자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.
- **세계 최고 인공지능(AI) 민주정부 구현**
  -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(AI) 공통기반을 구축하고, 정부·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(AI)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(AI) 서비스의 기획-개발-운영-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.
    - ▶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: ('26 신규) 206억
    - ▶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: ('25) 54억 → ('26) 74억
    - ▶ AI 행정업무 적용 : ('25) 42억 → ('26) 187억

-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(AI)을 적용해 강화하고,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.
  - ▶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: ('25) 53억 → ('26) 56억
  - ▶ AI Agent-공공서비스 연계 : ('26 신규) 8억
-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(AI)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인공지능(AI)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확대한다.
  - ▶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: ('25) 264억 → ('26) 305억

## □ 국민 안전 확보

-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인공지능(AI)·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·감시체계를 구축하며,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첨단 기술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.
  - ▶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: ('25) 51억 → ('26) 124억
  - ▶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: ('26 신규) 34억
  - ▶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: ('26 신규) 50억
    - ※ 최초 200억(행안부 50억+경찰청 50억+민간·지자체 100억)
- 집중호우·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,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.
  - ▶ 재해위험지역 정비 : ('25) 8,742억(추경 9,443억) → ('26) 1조 488억
  - ▶ 재난대책비 : ('25) 3,600억(추경 1조 200억) → ('26) 1조 100억

## □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

-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하며,
  -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,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도 확대한다.
    - ▶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: ('25 추경) 1조 → ('26) 1조 1,500억
    - ▶ 지방소멸대응기금 : ('25) 1조 → ('26) 1조
    - ▶ 마을기업 육성사업 : ('25) 17억 → ('26) 53억

- 접경지역,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.
  - ▶ 특수상황지역개발 : ('25) 1,942억 → ('26) 1,994억
  - ▶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: ('25) 618억 → ('26) 799억
  - ▶ 접경권발전지원 : ('25) 456억 → ('26) 533억
  - ▶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: ('25) 115억 → ('26) 153억
  - ▶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: ('25) 85억 → ('26) 107억
-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·확산한다.
  - ▶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: ('26 신규) 25억
  - ▶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: ('26 신규) 17억

#### □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

- 기후·환경·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,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.
  - ▶ 자원봉사 활성화 : ('25) 133억 → ('26) 178억
-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하여 그 넋을 달래고,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며,
  -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,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.
    - ▶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: ('26 신규) 184억
    - ▶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: ('25) 77억 → ('26) 86억
    - ▶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: ('25) 20억 → ('26) 32억

□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“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‘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’, ‘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’, ‘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’, ‘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’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”면서, “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기획조정실<br>기획재정담당관     | 책임자 | 과장(직무대리) | 이화령 (044-205-1402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  | 서민호 (044-205-1411) |
|       | 디지털정부정책국<br>디지털정부기획과 | 책임자 | 과장(직무대리) | 조원갑 (044-205-274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     | 허환녕 (044-205-2703) |
|       | 지방행정국<br>자치행정과       | 책임자 | 과장       | 박성민 (044-205-3101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  | 김형준 (044-205-3102) |
|       | 지방재정국<br>재정정책과       | 책임자 | 과장       | 김수경 (044-205-3702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     | 홍성우 (044-205-3703) |
|       | 안전정책국<br>안전정책총괄과     | 책임자 | 과장       | 송상훈 (044-205-41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     | 최기수 (044-205-4121) |
|       | 자연재난대응국<br>재난경감과     | 책임자 | 과장(직무대리) | 김범석 (044-205-52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수석전문관    | 김경찬 (044-205-5151) |
|       | 재난복구지원국<br>복구지원과     | 책임자 | 과장       | 박종빈 (044-205-531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서기관      | 강진모 (044-205-5314) |





## 1. AI 민주정부 구현 및 정보화 : 8,649억원

◇ △공공부문 AI 대전환을 위한 공통기반 구축 및 행정업무 적용, △AI 학습 데이터 가공·지원, △AI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 등을 중심으로 구성

- (공공부문 AI 확산) '범정부 AI'를 토대로 부처·지자체의 업무에 AI를 적용·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원
  - \*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: '26년 206억(순증)
- (범정부 AI 공통기반) 정부·지자체가 중복개발·투자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AI를 도입할 수 있도록 '정부 전용 AI 공통 인프라' 구현
  - AI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인터넷망에서만 가능했지만, 앞으로는 보안 걱정 없이 업무망에서 내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AI 서비스를 이용 가능
  - \*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: '25년 54억 → '26년 74억(+20억)
- (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) 행정업무에 AI를 적용, 업무 기능과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적 업무환경인 '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' 구현
  - AI가 정책보고서, 보도자료·기고문 등 문서 초안을 먼저 작성해주고, 편집까지 지원하여 문서 작성에 투입되는 과도한 노동을 획기적으로 절감
  - \* 전자문서소통시스템(AI 행정업무 적용) : '25년 42억 → '26년 187억(+145억)
- (공공데이터 개방) 기업의 연구·개발 지원 등을 위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며,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까지 확대 추진(+10개 과제)
  - \*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: '25년 264억 → '26년 305억(+41억)
- (공공서비스 혁신) △국민이 직접 찾기 전에 AI가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알아서 챙겨주는 AI 기반 맞춤 알림체계(혜택알리미) △일상언어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 'AI Agent-공공서비스 연계기반' 구축
  - \* 혜택알리미 : '25년 53억 → '26년 56억(+3억) / AI Agent-공공서비스 연계 : '26년 8억(순증)

## 2. 국민 안전 확보 : 2조 5,197억원

◇ △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측·감시 강화, △재난안전산업 경쟁력 제고, △재난피해 예방·복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구성

- **(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)** 위성·CCTV·드론 등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, AI로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생활안전 정보를 제공하고, 육안관제의 한계를 극복한 AI 기반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확산 지원
  - \*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: '26년 124억(+73억)
- **(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)**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현장상황 모니터링 및 신속한 상황판단·의사결정을 지원
  - \*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: '26년 34억(순증)
- **(재난안전산업 경쟁력 제고)**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투자펀드 조성
  - \*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: '26년 50억(순증)
- **(재해위험지역 정비)**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·붕괴 등 위험요인 정비사업을 지원 및 관리하여, 지역주민의 인명·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
  - \* 재해위험지역 정비(보조) : '25년<sup>추경</sup> 9,443억 → '26년 1조 488억(+1,045억)
- **(재난대책비)** 호우·태풍·산불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한 이재민 지원 및 신속한 시설 복구를 통하여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을 지원
  - \* 재난대책비(보조) : '25년<sup>본예산</sup> 3,600억('25<sup>추경</sup> 1조 200억) → '26년 1조 100억(+6,500억)
- **(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·재생)** 산불로 마을전체가 소실된 경북·경남·울산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과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체 복원 시설을 조성
  - \*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·재생 : '25년<sup>추경</sup> 100억 → '26년 120억(+20억)

### 3.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: 2조 5,921억원

◇ △지역사랑상품권과 지방소멸대응기금, △지역 자생력 제고 및 주민 생활환경 조성, △낙후지역 발전 지원 사업 등을 중심으로 구성

- **(지역사랑상품권 발행)**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수도권·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으로 지자체를 차등 구분하여 지역 사랑상품권 발행 지원

\*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: '25년<sup>추경</sup> 1조 → '26년 1조 1,500억(+1,500억)

※ (국비지원율) 수도권 3%, 비수도권 5%, 인구감소지역 7%

- **(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)** 기존의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,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, 은퇴자·이주민 주거·정착 지원사업,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청년 창업 지원 등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가 큰 프로그램 사업에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 등 평가·배분체계 개편

\*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: '25년 1조 → '26년 1조(전년동)

- **(마을기업 육성)**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·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단위 기업 발굴·육성 지원 확대

\* 마을기업 육성사업 : '25년 17억 → '26년 53억(+36억)

- **(지역주민 참여 확대)** 주민참여와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민·관·공·산·학 거버넌스 협력체계 및 기초지자체 단위 지역역량성장거점을 구축

\*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: '26년 25억(순증)

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: '26년 17억(순증)

- **(안전한 화장실 조성)**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탐지 시스템(+2,500개)과 비상벨(+3,500개)을 설치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구축

\* 불법촬영탐지 시스템 : '26년 31억(순증) / 비상벨 : '26년 32억(순증)

- **(특수지역 발전 지원)** 국가안보상 지역발전이 어려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자체 토지매입·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,
  - 소외된 접경지역 및 섬지역의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소득을 증대시켜 주민 복리·균형성장 도모
- \* 특수상황지역개발 : '25년 1,942억 → '26년 1,994억(+52억)
-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: '25년 618억 → '26년 799억(+181억)
- 접경권발전지원 : '25년 456억 → '26년 533억(+77억)
-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: '25년 115억 → '26년 153억(+38억)
-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: '25년 85억 → '26년 107억(+22억)

#### 4.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: 6,898억원

◇ △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, △발전적 과거사 해결 등을 중심으로 구성

- **(자원봉사 활성화)** 2026년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맞아 지역별 특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,
  - 기후·환경·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를 육성하는 '마리안느·마가렛 글로벌리더 양성 거점공간'을 조성
- \* 자원봉사활성화 : '25년 133억 → '26년 178억(+45억)
- **(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시설)**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·전시관 등 위령시설을 조성하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,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
  - \*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: '26년 184억(순증)
- **(트라우마 치유지원)**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유활동을 제공하여 신체적·정신적 후유증을 완화
  - \*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: '25년 20억 → '26년 32억(+12억)
- **(대일항쟁기 강제동원)**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를 지원하고,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한 전시·교육사업, 유물 수집 등을 추진하여 피해자를 위로하고 국민 역사의식을 고취
  - \*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: '25년 77억 → '26년 86억(+9억)